

다산포럼



임철순
데일리임팩트 주필

지난 2월 26일 타계한 이어령 선생은 우리 문화행정의 초석을 놓은 분이다. 1990년 신설된 문화부의 초대 장관로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어연구원을 설립하고 '갓길' '나들목' 같은 말을 만들어 냈다. 이런 구체적 업적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문화바람'을 불어넣은 것이다. 취임 직후 발표한 문화행정 지표로는 '문턱 없이 일하기' '생색내지 않고 일하기' '사심 없이 일하기' 등의 삼불 원칙과 '마른 바위에 생명의 이끼 입히기' '문화우물터에 하나의 두레박 놓기' '부지깽이 되기'의 삼가 원칙을 내세웠다. 문화인들이 지향하고 문화행정이 추구해야 할 의미론이 담긴 지표였다. 문화부 장관이 어때야 하는지 전범을 보여 주었던 그의 타계는 문화부와 문화부 장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게 만든다.

문화부는 기구했다. 1968년 발족된 문화공보부가 노태우 대통령 때인 1989년 12월 말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된 데 이어 1990년 1월 3일 문화부가 신설됐다. 그런데 불과 3년 뒤 김영삼 대통령 때인 1993년 3

아무나 하는 문화부 장관

월 문화체육부로 바뀌더니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때 문화관광부가 되고, 이어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08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 몸집이 더 커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한 지붕 세 가족'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잡음이 들리거나 산만한 운영으로 인해 문화행정의 신뢰를 얻기 어려웠다.

더 큰 문제는 역대 대통령들의 문화나 문화부에 대한 무신경 무관심이었다. 수시로 기구와 소관 업무를 바꾸고 문화행정과 거리가 먼 인사를 장관에 기용하는 사례가 잦다 보니 문화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조직, 문화부 장관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돼 버렸다.

문화부 장관에는 집권당의 국회의원(정치인)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역대 장관 중 내부 관료 출신을 기용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유진룡 장관이 처음일 정도였다. 장관이 꼭 문화부 출신 인사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이나 업무의 연속성에서 경제 관료나 정치인 등 외부 인사보다는 당연히 낫다.

그나마 장관들의 재임 기간이 짧아 2년 이상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원래 아무나 시켜도 되는 자리인데 자리를 쟁겨줘야 할 그 '아무나'가 줄을 서고 있으니 적임여부는 따지지도 않게 된다. 그렇게 임명된 장관들은 문화 체육 관광 등 문화부의 소관 업무에 '얼골'을 내미는 행사가 많아서 이곳을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자리쯤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말로(1901~1976)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에 가담해 사를 드

골 장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그 뒤 드골의 첫 번째 내각에서 임시 공보장관을 맡았고 1958년 다시 드골 밑에서 10년 동안 제5공화국 초대 내각의 문화부 장관으로서 혁신적인 문화행정을 펼쳤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임명권자의 문화 의식과 인사 정책이다. 문화부 장관을 임명할 때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 전문 경력 등을 두루 살펴 인선을 하고 임명한 뒤에는 소신껏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문화행정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다. 20대 대선이 끝나면 5월엔 새 대통령이 취임할 텐데, 문화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뭐 있을까? 대선 후보 토론회도 문화 부문은 열리지도 않았고, 각 후보의 문화 정책에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이슈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

새로 대통령이 되는 분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문화부를 노태우 정부 때처럼 독립된 부서로 운영하고, 문화행정의 발전을 위해 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며, 문화 부총리에는 정치인이 아니라 문화예술인이나 문화교육자 등 행정력을 갖춘 사람을 임명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정책과 행정을 정착시켜야 한다. 편파적이거나 블랙리스트 적용과 같은 차별·배타적 행정이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당연히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문화 부총리로 임명해 소신대로 자율적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요컨대 아무나 문화부 장관을 시켜서는 안 된다.

NGO 칼럼

'후쿠시마 핵사고'가 광주에 보내는 메시지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

이뿐만 아니라 안전보다 경제성이 우선시되어 130만 t에 이르는 방사성 오염수들은 바다에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버려질 예정임이다. 특히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므로 130만 t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핵발전소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사람이 적고 운영에 편리한 곳에 건설하다 보니, 지질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곳에 핵발전소가 지어졌습니

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주에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저장소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핵발전소 부지 선정에 무지하고 무책임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진으로 수능까지 연기했던 포항도 경주 핵발전소에서 멀지 않습니다.

또한 한빛 3·4호기에서는 부실시공으로 최후의 보루인 격납 건물에서 수백 개의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밀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없어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과 사람이 직접 격납 건물 벽을 두드려 공명으로 빈 공간을 찾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성 핵발전소에서는 부지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방사성 검출이 명백하지만, 음모론을 운운합니다.

이것뿐일까요? 후쿠시마 핵사고 직후 부라부라 핵발전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십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대책도 무용지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대책이 수소 제거 장치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처럼 수소 폭발을 방지하고자 핵발전소 격납 건물 내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였으나 오히려 온도가 상승하면 불꽃을 발생시켜 화재가 발생하는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에 외국 실험실에서 확인되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국에서 재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불꽃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세계 최고 기술이라는 대한민국 핵발전소 기술의 현주소입니다.

최근에는 핵발전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부지 선정에서 건설까지 10년이 넘게 소요되는 핵발전소에는 해당되지 않는 녹색 분칠에 불과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핵발전소는 매우 위험하며, 현존하는 어떤 기술로도 그 위험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후쿠시마 핵사고를 예측한 과학자나 전문가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천 번 만 번 외쳐도 과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기고

광주시 '그린 시티' 조성을 위한 제언



윤병선
광주시 대전환특별위원회-임학박사

다. 또한 광주-전남 통합의 기반을 조성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달빛고속철도 조기 개통을 통해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초광역 신남부 경제권을 구축해 양적 성장을 이룬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용어가 생소하겠지만 쉽게 말해 '그린 스마트 펀 시티'(Green Smart Fun City)를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친환경 녹색 도시, 인공지능(AI) 기반의 최첨단 도시, 재미있고 친숙한 도시로 탈바꿈해 나가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숙주(인간)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광주 대전환 특별위원회의 3개 분과 모두 중요하지만 필자는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기후위기 대응은 지구촌 모두의 관심사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 참 고마운 분들이다.

광주 대전환 특별위원회가 추구하는 그린 시티도 과제 발굴부터 시민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계 부서의 검토와 공감을 얻어 시책 사업으로 이어질 때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광주전 시대에서 영산강 시대로의 대전환은 영산강

물길을 따라서 광주, 장성, 담양, 화순, 나주, 영암, 목포를 연결하는 광역경제권 생태·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보고, 즐길 수 있는 사업이다. 여기에 시립수목원과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도심 생활권 주변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광주호 생태문화 마을과 활동강 장륙습지를 생태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것도 그린 시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시책이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정원 문화를 확산하여 푸른 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싶다. 지난 2015년 1월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원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정원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가 정원, 지방 정원, 민간 정원, 생활 정원, 주제 정원, 모델 정원 등 정원 종류에 대한 규모와 시설 기준도 마련됐다.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조례로 만들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원 문화를 꽃 피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원 문화와 관련 산업은 그린 시티의 핵심 과제일 뿐만 아니라 시민이 보고, 즐기고, 치유할 수 있는 '편 시티'와 연계할 수 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제 과제 발굴이 시작 단계인 만큼 시민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스스로라도 제안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광주시의 그린 시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社說

전국 최고의 기록적 투표를 호남 표심 어디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 표심'이 막판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결집도가 강한 호남 유권자의 사전 투표율이 전국 최고이자 역대 선거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지난 4~5일 진행된 사전 투표에서 호남은 50% 안팎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36.93%)을 크게 웃돌았다. 전체 유권자의 98%가 선거 당일이 아닌 사전 투표에서 이미 후보 선택을 마친 것이다. 전남이 51.4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북 48.63%, 광주 48.27% 순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1~3위를 휩쓸었다. 시군구별로는 신안군(61.62%)과 장성군(60.51%)이 60%가 넘는 기록적 투표율을 보였다. 이 같은 투표율은 지난 2014년 사전 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역대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상승한 이유로는 유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선거 당일보다 사람이 덜 몰리는 사전 투표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런바 분산 효과다. 초집전 양상의 대선 구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지총 결집을 노리며 사전 투표 참여를 독려해 온 여야는 높은 투표율이 자기 쪽에 유리하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 총결집의 결과라며 승기를 잡았다는 입장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민주당 지지층의 위기의식을 확산시켜 결집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풍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열망의 표출이라고 분석했다. 호남 지역 사전 투표율 급등 역시 2030세대를 중심으로 변화를 원하는 민심이 결집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호남의 투표 열풍이 서울 등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투표함을 열어 보기 전까지는 그 향방을 알 수 없겠지만, 호남 민심이 초박빙 판세의 선거전에서 승패를 가름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확진자 폭증 속 방역 완화 의료체계 문제없나

광주-전남에서 연일 1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방역 의료 시스템에 경보등이 켜졌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광주 6474명, 전남 5738명 등 모두 1만 2212명으로, 9새 연속 1만 명대를 이어갔다.

광주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구 한 요양원에서 24명이 더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98명으로 늘었다. 광산구 요양 병원에서 12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38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고흥의 한 공장에서도 49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어 중증·중증 중 병상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남대·조선대 병원 등에 마련된 중증·중증 병상 119개 중 남아 있는 것은 11개

(9%) 뿐이다. 중증 병상은 총 54개 중 전남대병원에 세 개만 남은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시작 모임 인원은 여섯 명으로 유지하되, 식당·카페 영업 시간은 밤 11시까지 한 시간 연장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와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나 현재도 포화 상태인 지역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단계적 방역 완화로 예견되는 위중증 환자들을 전담할 수 있는 병상 확보와 의료 역량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하루 새 200명이 넘게 숨지고 위중증 환자가 1000명대에 육박하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감염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희생되는 환자들이 없도록 의료시스템을 긴급 점검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전통 농경사회에서 대보름에 쥐불놀이와 함께 논두렁 태우기가 성행했다. 국가적 목표를 식량 증산에 두었던 시절에도 이러한 관행은 이어졌다. 줄무늬야마를 병을 옮기는 애벌레 유충을 박멸하기 위함이었다. 다행스럽게 요즘은 불철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덕분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일 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가 건조한 기후의 3~4월이다. 산림청의 '2020년 산불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체 산불 620건 중 58%(3월 28%, 4월 30%)가 봄철에 발생했다. 3월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군데 내화소(耐火燬)를 심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강풍 속에서 대형화되는 산불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서는 소방 헬기 외에 대용량의 소화액을 뿌리는 대형 소방항공기 도입도 필요하다.

특히 봄철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이 대형화되는 까닭은 국지적 강풍과 연관돼 있다. 백두대간 동쪽에 위치한 영동 지방 양양과 간성의 첫 글자를 따서 '양간지풍(襄杆之風)'이라고 부르는 국지성 강풍이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

람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고온건조한 강한 바람으로 바뀐다고 한다. 2020년 3월 발생한 '울주 산불' 당시 풍속은 초속 19.2m에 달했다. 동해안 국지성 강풍으로 인한 산불 발생의 역사는 '1524년 3월에 경포대와 민가 224호가 소실됐다'고 사서에 기록돼 있을 정도로 꽤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근 경북 울진 등지에서 대규모 산불이 잇따라 산림청과 지자체 등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산불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50년만의 겨울 가뭄과 강풍을 막기 위해 집업수림 군데 내화소(耐火燬)를 심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강풍 속에서 대형화되는 산불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서는 소방 헬기 외에 대용량의 소화액을 뿌리는 대형 소방항공기 도입도 필요하다.

시골에서는 '산불 감시'라는 빨간 삼각 깃발을 달고 담당 지역을 순찰하는 산불 감시원 차량을 자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건조기온 요즘,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